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정책 사각지대에서
날개도 못 펴 본 오리 산업의 추락

한국오리협회 경남도지회
이채진 지회장



HPAI 애물단지 취급받는 현실 속상

“지난겨울에도 그랬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는 HPAI로 인해 오리를 키운다는 이유 하나로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을 때마다 속상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오리협회 경남도지회 이채진 지회장은 HPAI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오리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회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AI 발생 원인을 열악한 시설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라며 “타 축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전업화로 인해 규모화의 기회마저 없었던 오리농가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 오리 농가의 76%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로 사육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고 싶어도 농가 규모가 영세해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타 축종보다 불리하다는 것이 이 지회장의 지적이다.

이 지회장은 “오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초반이며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입지를 다진 시기는 2000년대 들어서이다”라며 “하지만 타 축종의 경우 오리보다 20~30년 앞서 규모화, 전업화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축산물수입개방, UR협상, FTA 등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지원을 해줬지만 오리 농가들은 이 같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오리 농가들은 규모화, 전업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HPAI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기

도 전에 날개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HPAI발생 원인을 오리업계로 돌리고 있는 방역 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였다. 이 지회장은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없는 오리 농가들에 타 축종과 같은 수준의 방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오리 농가들이 방역 대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정책들

한미FTA 체결된 이후 정부는 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를 지원해 줬다. 그러나 오리 농가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인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지금도 75%가 가설건축물로 지원대상이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리 농가들은 타 축종보다 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고 매년 반복되는 HPAI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지회장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 지회장은 오리 산업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오리협회에서 정부에 오리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 축사 시설을 판넬형 무창축사 등 현대화시설로 전환하는 ‘오리 사육시설 개선 지원사업(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책당국에서는 아직 명확한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 현실은 암울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적 지원 절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리 농가 지원을

오리 산업은 한때 생산액 2조 원을 바라보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1조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 매년 반복되는 HPAI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오리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HPAI 발생 때마다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육계 등으로 전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오리 농가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소득은 줄어들어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직면한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오리 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는 이 지회장.

이를 위해서는 오리 농가를 위한 특별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이 지회장은 “기존의 축산법에 따라서는 오리 농가들은 타 축종에 밀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지원사업에서도 오리 농가들은 소외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제대로 된 축사에서 오리를 키우고 싶지 않은 오리 농가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오리 산업과 농가들을 위해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